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일 시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2시~4시 30분

장 소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번지)

공동주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안내] 토론회 진행순서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부] 14:00~15:00 발제	
14:00~14:05	토론회 소개 및 안내
14:05~14:15 (10분)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경과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4:15~15:00 (각 15분)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로 본 국가의 역할과 책임 - 박효진 (초등교사,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성평등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의미 - 타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브리바디 플래저랩)
	지적 자유,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과제 - 정원옥 (문화연대 집행위원)
[2부] 15:10~16:30 토론 및 종합토론	
15:10~15:50 (각 10분)	전국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충남] 장규진 (전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인천] 기선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공간 할 활동가) - [대전] 이해선 (인권교육공동체숲 활동가, 전 대전광역시인권센터) - [경기] 이선영 (초등사서교사, 전교조경기지부 사서교사위원장)
15:50~16:20	참여자 종합토론
16:20~16:30	토론회 마무리 및 향후 활동계획 안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경과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2023년 충남·충북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시작된 도서 퇴출

1) ‘보수 학부모 단체’의 공격 시작

- 2023년 5월 |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대’(다학연)의 도서 퇴출 에서 충남 공공도서관에 <우리 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하기>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비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시민 제보를 받음. 해당 인쇄물은 ①성평등 가치에 대한 왜곡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목하고, ②양육자들에게 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를 요청하도록 민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¹
- 2023년 7월 | 도서 폐기 요구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던 중,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충남 공공도서관 관계자 면담을 진행함. 면담을 통해 5월 초부터 충남교육청 산하 모든 도서관에 ‘꿈키움성장연구소’의 도서 퇴출을 요구하는 공문² 이 발송되었고, 이후 전화 및 방문 등 집요한 민원 제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함. 민원 대상이 된 한 도서관에서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특정 책의 폐기는 불가함을 알리자 반복된 민원과 괴롭힘이

¹ [대응] 해당 인쇄물은 미래엔 아이세움 출판사의 <살아남기> 시리즈 제목과 삽화를 무단사용한 것. 우선 인쇄물의 배포를 막기 위해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출판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시리즈 도서의 제목 및 삽화가 차별혐오 선동에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함. 이후 출판사에서 대응하며 인쇄물 배포는 일단락됨.

²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성혁명폐기적 용어들. 즉, 다양성,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등을 근거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도서는 마땅히 폐기 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해당 도서 검토해 규정에 의거 폐기해달라”

이어졌고, 해당 도서들을 서가에서 빼어 보존서고 등으로 이동시킴.³ 마찬가지로 충북 지역에서도 ‘행동하는 학부모연합회’ 등의 단체에 의해 도서를 폐기하라는 민원이 반복됨.

2) 지자체장에 의한 열람제한과 대응

- 2023년 7월 | 충남도의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민규 의원(국민의힘)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문제 삼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도서를 도내 36개 도서관에서 열람제한 조치했다고 밝힘.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김일수 충남부교육감 역시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짚으며 논의 및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함.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회수 조치한 7종의 도서를 살펴보았는데 낫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으로 아이들의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연령대,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교육 목적에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에 열람을 제한하였습니다. 젠더 문제, 성소수자 권익 문제 등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서 성소수자 공공장소 입장 제한이라든가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제한 등 차별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성소수자 그리고 심지어 수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낫 뜨거운 부분들을 아이들 성교육 자료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 옹호를 내세우는 의도를 보면 일반인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 2023년 7월 | 도서 열람제한 사태가 알려지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화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도서관협회와 도서관계, 독서 및 출판단체 등 유관단체 등 다양한 단위에서 성명 및 논평을 발표함.
- 2023년 8월 | 긴급하게 지자체장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진행함. 충청남도는 여성가족부 나다움어린이책> 지정취소 도서(6종) 및 충청남도의회 긴급현안질의 관련 도서(4종)까지 총 10종에 대해 별도로 비치했으며, 일부 성교육 도서는 보호자 동의 하에 함께

³ [대응] ‘보수 학부모 단체’ 도서 퇴출 요구 민원에 대해 도서관 사서들이 다른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외 전국 1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충청남도 및 충남교육청 산하 62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함. ①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②어린이청소년, 양육자 및 교육자, 지역주민 등 시민들이 존엄과 평등,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폭넓은 성평등·성교육 장서를 요청함.

볼 수 있도록 별도로 비치했다고 밝힘.⁴ 충남교육청은 공공 및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공공 및 도서관의 자료 수집과 제공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함.

[참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공동주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23.8.1.

3) 충남도지사의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 2023년 8~9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이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학생, 양육자, 사서, 저자를 포함한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 진정에 참여할 공동진정인을 모집함. 9월 8일 ①도서 10종에 대한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충남도지사, ②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충남교육감, ③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총 304명의 충남도민과 『Girls' Talk 걸스 토크』의 저자인 이다 작가가 진정인으로 참여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국가인권위 진정 사실이 알려지고 충남도의회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열람제한 조치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짐(공공도서관의 운영 기준, 특정 도서와 관련한 민원시 행정절차 및 법적 근거, 향후 같은 민원 대응 방안 및 계획, 특정 도서를 열람제한 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지 여부 등). 김태흠 도지사는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리 침해 결정이 나오더라도 따르지 않고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있다고 해도 저는 따르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하면서 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원회가 최고의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라는 것은 100%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입장에서, 하여간 그 뜻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저는 제가 도지사로서 있는 한 이 부분은 되돌리지 않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4) #유해도서 아니고 필독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대응

- 보수 학부모·시민단체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배제 요구 민원과 지자체의 도서 열람제한 소식이 전해지자,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대응 캠페인 및 활동을 전개함
- 6~8월 |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⁵

⁴ 해당 열람제한 조치의 근거는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열람)로, 도서관장이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의적용한 것임.

⁵ 「“이 책을 왜 도서관에서 없애란 거죠?”...‘금서’ 찾아 읽는 사람들」, 『경향신문』, 2023.7.30.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학부모 단체가 반대하는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관련 전문가 및 충남 지역 시민들과 직접 읽고 토론하는 책담회를 총 4회차 진행
- 8월 | 성평등 도서를 지키는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온라인 해시태그 캠페인⁶
 - 어린이책을 성평등 관점으로 읽고 연구하고 나누는 모임인 '예민한도서관'에서 시민들이 1)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 대출, 2) 희망도서 신청, 3) 성평등 도서 구매를 촉구하는 캠페인 진행
- 8월 | 알라딘에서도 어린이 추천도서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이벤트 진행
- 8월 | 함께 모여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읽는 '행동독서회'⁷
 - 2018년 '미투'를 지지하는 행동독서회를 제안·진행했던 시민들이 2023년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항의하며 행동독서회를 진행
- 9월 |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위한 시민연대, 제9회 금서읽기주간⁸
 -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도서관 내 도서 검열 사태 이후 시민사회 활동으로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가 만들어지고 '금서읽기주간' 운동이 시작됨. 제9회 금서읽기주간(9.1~9.7)에서는 함께 읽고 토론할 도서로 현재 검열과 배제 요구 대상이 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제안함.
- 9월 | 지역 내 금서 축제 및 독서모임 등 진행
 - 충남 홍성군 내 홍동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 및 열람제한에 대응하는 <제1회 홍성 금서 대축제>(9.11~9.16) 개최⁹
 - 광주여성민우회에서도 보수 학부모·시민단체가 도서 퇴출을 요구하자, 금서로 지목된 도서 17권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읽고 도서 선정 이유와 추천 글귀, 소감 등을 나누는 페미니즘 독서모임 <금을 넘는 독서> 진행

2. 2024년 경기도 학교도서관 내 도서 대량 폐기 사태까지

1) 경기도교육청의 성평등·성교육 도서 '처리' 압박

- 2023년 9~10월 | '보건학문 & 인권연구소'(보앤인)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유해도서 분리제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세종시시립도서관에서는 민원 이후 유해도서로 자체 판단해 보존서로 이동시켰다는 사례도 함께 제시함.

⁶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금서'? "우리가 읽어보자" 운동 확산」, 『한겨레』, 2023.8.8.

⁷ 「행동독서회 "책 읽으며 도서관 검열 반대합니다"」, 『내일신문』, 2023.8.17.

⁸ 「둘리, 몽실언니도 한뎠 금서였다...올해 어떤 금서 읽어볼까」, 『한겨레』, 2023.8.31.

⁹ 「"읽지 말라니까 더 궁금해" 대박난 홍성 금서 축제」, 『오마이뉴스』, 2023.9.18.

- 2023년 11월 |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과)이 각 교육지청에, 각 교육지청이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민원 공문을 그대로 전달하며 ‘유해한 성교육 도서’에 대해 조치하도록 함.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유해한 성교육 도서에 대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 도서를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과 도의회 및 국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성교육과 관련된 도서 선정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며, 학교에 소장하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문)

- 2024년 2월 | 경기도교육청이 각 교육지청에 공문을 재차 발송하며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을 재출할 것을 압박함. 성교육도서 폐기 자료집계 예시에는 ‘제적 및 폐기’와 ‘열람제한’ 두 가지만을 제시함.

2) 경기도교육청의 압박에 의한 2,528권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 2024년 3월 | 경기도교육청이 도서를 폐기하도록 압박하고 폐기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이 교사의 제보로 알려지면서 경기도 및 전국 305개 시민사회단체, 개인 4398명이 제출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2024년 5월 |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1년(2023.3~2024.2) 동안 경기도 내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총 2,528권(517종)의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¹⁰ 경기도교육청은 “생각했던 것보다 폐기된 도서 양이 많아서 그점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학교에서 자체 판단한 내용”이라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음.

3) 도서 폐기 압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 2024년 6월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교육권, 교사의 노동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보고어린이·청소년, 교사, 학부모 및 시민들을 포함한 572명의 공동진정인과 함께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함. ①경기도교육청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 열람 제한을 압박한 행위는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규탄하고, ②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학교도서관에서 정당한

¹⁰ 「경기지역 학교들, ‘유해도서’ 압박에 성교육 도서 2500권 폐기」, 『경향신문』, 2024.5.7.

「학교도서관에 유해 성교육 책이 500여 종? 폐기된 책 목록 봤더니」, 『KBS』, 2024.5.15.

이유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 열람제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3. 전국·지자체로 번진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요구

1) 보수개신교 단체에서 ‘보수 학부모 단체’로

- 충남 지역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 민원이 가시적인 결과(지자체장의 열람제한 지시)로 나타나자, 보수 학부모·시민단체는 ‘음란유해도서 퇴출’을 목표로 전국적인 민원 조직 및 도서 퇴출 운동에 나섬
- 2020년 여성가족부의 어린이나다움 책 회수 당시에도 성평등·성평등 도서에 대한 공격은 보수개신교 단체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에 벌어진 도서 퇴출 사태 역시 마찬가지임. 하지만 보수개신교 단체들은 기존의 ‘반동성애 단체’ 혹은 ‘혐오선동세력’이라는 기존의 이미지 대신 자녀의 교육을 염려하는 ‘학부모/단체’의 위치에서 도서 퇴출 운동을 펼쳐나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보수개신교 단체의 입장에 동조하는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조직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가세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

2)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일괄적인 ‘청소년유해간행물’ 지정 시도

- 충남·충북 지역 공격 이후, 보수 학부모 단체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에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심의하고 ‘유해도서’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 간윤위는 해당 도서가 심의 대상(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이 아니라고 판단함.
- 2023년 11~12월 | 보수 단체들은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 대상임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법제처에 제기함. 법제처는 확인요청간행물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음.
- 2024년 2~4월 |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간윤위에서 2~4월 동안 총 68권의 도서에 대한 심의를 마침. 심의 결과 총 68권 중 1권인 문예출판사의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함(4.19). 나머지 67권 도서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함.
- 2024년 5~6월 | 문예출판사는 재심을 신청하고 공식입장문 발표함. 성교육 도서에 대한 유해도서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짐.¹¹ 이후 간윤위는 재심의 후 “윤리성, 건전성에 비추어 유해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재심의 결정을 번복함.

¹¹ 「“자유 국가에서 성교육 책이 19금 유해물?” 한국 정부 비판한 스웨덴 작가들」, 『한국일보』, 2024.6.24.

3) 제도를 활용하며 지속되고 있는 도서 퇴출 시도

- 2024년 8월 | 충남도의회 이상근 도의원이 ‘자료의 열람·대출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충남도도서관 및 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함. 해당 조례안에 대한 취재와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발의한 의원은 “수정해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임.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제4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건전한 독서자료 제공) ① 충남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유해자료”라 한다)가 충남도서관에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
2.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거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료

② 충남도서관장은 매년 1회 이상 유해자료의 반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제18조의3에 따른 자료선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④ 충남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유해자료를 발견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이용 제한 및 폐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로 본 국가의 역할과 책임

박효진 (초등교사,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여성위원장)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박효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크게 불거진 요즘 그릇된 성인식을 바로 세울 제대로 된 성평등교육, 성교육과 그것을 도울 성평등, 성교육 도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학교는 얼마 전 개학을 했는데요. 방학 직전에 학생들이 연애를 많이 시작하였는데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개학 직후 2학기 교육과정에 ‘관계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 학생들이 성표현물을 시청하고 친구에게 권했다는 제보를 받고 개학하자마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음란물 중독 예방 교육’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보니 가정에서 학생들을 모으고 성교육 강사를 모셔 별도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은 학생들이 텔레그램에 가입하는 일이 잦아 알아보니 자신의 학교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아도 학생들과 잠시만 지내보아도 학생들은 긍정적인 모습이든 부정적인 모습이든 이미 성적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 성평등, 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에서 보여준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인식과 확연히 다른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실과 집에는 이번 사안에 등장한 책들이 꽤 여러 권 있습니다. 학생들이 읽게끔 학생 책장에 꽂아둔 책도 있고 제가 필요할 때 참고하려고 제 책장에 꽂아둔 책도 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을 하기 위해 만든 전국 100개가 넘는 성교육 기관으로부터 여러 단체가 꾸준히 공격받은 전례에 비추어 보면 각 책들의 어느 페이지가 눈에 띄어서 시민단체들이 심의 대상으로 올렸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설명이 있거나 해도 혹은 청소년이 궁금해할 성지식을 알려주거나, 특히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면, 임신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성적인 행동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도서들이 퇴출 대상이 된 이유 중 첫 번째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성적 쾌락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하니 자기들이 읽어야 할 책을 왜 못 읽게 하는

거나, 학교에서 안 배우면 언제 어디서 배우라는 거냐며 응원해 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학생들의 말로부터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의까지 갔던 책은 스웨덴 성교육 전문가가 쓴 남학생 성교육 책인데요. 굉장히 다양하고 섬세하게 구체적인 성지식을 알려줍니다. 스웨덴의 성교육이 궁금하여 스웨덴 교육 전문가에게 스웨덴 성교육 강의를 요청하여 배우기도 했는데요. 스웨덴 성교육에 대해 알고 나니 그 책은 특별히 성에 대해 자세히 서술된 책이 아니라 스웨덴의 인권 의식, 성평등 의식, 성교육 철학 안에서 쓰여진 교과서와 비슷한 기본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역시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고 순결주의 성교육을 주장하는 종교가 교육과 사회에 영향을 과도하게 미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두 나라의 성평등교육, 성교육을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은 1958년도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되었고 교육과정 안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학교 생물 교과에서 성, 정체성, 관계 등을 주로 다루고 초등 고학년~중학교 사회에서는 주로 인권의 테두리 안에서 다음과 법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UN의 아동권리법’이나 성,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나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Yes)나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때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이라는 ‘성교동의법’같은 것입니다. 중학교 생물 교과서의 내용은 꽤나 자세해서 별도의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거나 고등학교 때는 성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기 몸의 변화와 성적인 행동에 대해 안내합니다.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림으로 안내하며, 모양과 크기에 대해 성생활과 관련지어 걱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죄의식이 심어지게 부정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이 한다고 알려줍니다. 성교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뿐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도 한다고 서술하며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사랑에 이어 육체적 접촉을 안내할 때 성교 외에 다양한 방식을 안내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이기에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안내하는데요. 교과서 안의 삽화나 사진들은 다양성이 눈에 띄입니다. 성소수자와 장애인의 성적 권리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뒤의 성교육이 다채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성적 주체로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구 사용 등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그러면서도 할레나 명예 살인, 여성에게 일방적인 순결 요구 등 성의 부정적인 측면과 다양한 성폭력 방식, 성병, 성표현물이나 매춘 같은 성오용과 남용, 성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며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을 알려주어 성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질투가 나거나 헤어질 때 상대방을 존중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부모 역시 헤어질 수 있다며 부모가 이별, 이혼, 재혼 했을 시 어려움을 겪을 학생들을 살피고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은 인생의 한 부분이고 친밀한 관계 맺기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렇기에 각 교육내용의 끝에는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퇴출하라는 민원이나 지시가 가능했던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갖추지 못한 것과 원인이 명확해집니다.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갖추고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성평등교육, 성교육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와 종교의 이해에 따라 교육이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학교 도서관에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도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공청회장에 종교단체가 집단으로 와서 소란을 피우며 항의하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우리 나라에서 폭넓은 성평등교육, 성교육이 가능할까라고 상상해보면 아마도 일부 종교 단체의 반발과 정치계의 외면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성평등교육, 성교육을 할 때 혹은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조차도 교사들은 얼토당토 않은 민원을 염려해야 합니다. 반면 스웨덴은 종교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둘째, 성교육을 법제화 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성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공공도서관의 장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도 성평등교육, 성교육은 비장애인, 이성애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개별 가정의 관심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성교육이 사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의 건강권이 다르게 보장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성 건강을 지키고, 성에 대해 바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며, 성과 관련된 문제를 건강하게 대처하도록 돕는 포괄적 성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성교육, 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으로 분리하고 타교과와 분절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전 생애에 관련한 자신의 몸과 관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들이 성소수자에게만 보장되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웨덴의 포용적인 성교육의 방식과 내용은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성소수자를 언급하는 책이 있다는 이유로 도서관에 민원을 넣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성소수자 학생들도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이미 몸과 관계에 대해 탐구하고 선택하는 성적 주체입니다. 성적인 쾌락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성적인 지식과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어서 알아야 한다고 한다면 의무교육 안에서 바른 성 지식과 태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성착취와 성범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 건강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며 주체적이고 책임있게 자신의 성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성적주체로 인정하고 바른 성적 지식과 태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성평등 교육, 성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원들은 성평등교육,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교원 양성체계나 이후의 연수체계에서 해당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교원 양성체계에서는 성교육, 성평등교육을 체계적이고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평등, 성교육 도서는 공공도서관에 확충되어야 하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비롯한 성교육 전문기관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성폭력에 실효적인 예방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몸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길 바라지만 어떤 학생들은 성폭력예방교육을 하여도 어떤 성폭력은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디지털 성폭력 가해에 쉽게 빠져드는 원인도 그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의 성폭력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가 미약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에 학교폭력사안으로 성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해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그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문화를 만들고 그러한 질서를 함께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퇴출시키려는 시도는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한 일이었지만, 그러한 일을 시도하는 집단의 힘과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더 선명히 보이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 성교육 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에서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새롭게 사회에 확산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며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의미

타리/나영정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에브리바디 플래저랩 팀장)

1. 들어가며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번역되어 유통된지 수년이 지났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강사, 인권단체, 청소년 페미니스트 집단, 장애여성 단체,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국가에게 요구해왔고,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애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나 단체에서 한 발만 옮기면 시민사회 혹은 당사자 집단 안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인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큰 실정이다.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도서관에서 검열당하고 계속해서 성평등·성교육의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점검부터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질문해본다. 우리는 무엇을 방어하고 무엇을 권리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성평등/성교육 받을 권리로 구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포괄적이라고 규정하고 무엇을 성적 권리라고 정의하는가. 학교 성교육에서 불만족한 이들이 성교육 과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또한 능력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도서관에서 퇴출된 도서를 다시 읽으며 이 도서야말로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책이었다는 깨달음을 얻고 이 억압의 부당함을 각성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이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사회 변화의 근거로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발제문은 포괄적 성교육을 세어가 해석하고 실천하면서 발견한 것을 공유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운동의 지향으로 계속 삼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과 도전을 함께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발제문은 세어의 경험과 관점에 기반해있기 때문에 총체적이지 않다. 하지만 학교 성교육에서 배제된 이들이 알려준 것들이 포함된 관점이기 때문에 포괄성을 가진다고 여긴다. 또한 이 발제문은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모든 것을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성교육에서 배제된 항문 섹스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포괄성을 가진다고 여긴다.

항문 섹스를 배울 수 없다고, 가르칠 수 없다고 여기는 인식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성적 즐거움에 대해서 배우거나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여기는 인식 속에서 정당화된다. 또한 성매개감염 예방을 위해서 콘돔을 말하면서도 항문 섹스를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항문 섹스 자체를 ‘바이러스화’ 하는데 공모한다. 그렇다면 다른 성행동에 대해서도 결국 마찬가지로 된다. 임신과 성폭력, 성매개감염 예방만을 위해서 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교육 안에서 성적 즐거움을 삭제한 채 성생활, 성적 욕망, 성적 관계에 대해 배우거나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관계와 상황의 복잡성과 연속선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위험에 대한 예방만을 주목하고 위험이 벌어진 이후의 지속되어야 하는 삶과 권리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원치않는 임신을 한 사람을, 성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성매개감염이 된 사람을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조차 차별하고 배제하고 미워하는 논리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사람들도 바로 그 이유와 상관없이,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전히 행복을 느끼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성교육과 ‘사회’는 바로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동의하시나요.

2. 모두의 즐거움을 성적 권리로 만드는 성교육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들

- 즐거움을 금지하는 권력에 도전하기¹

세어는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성교육에서 배제된 다양한 소수자들의 현장으로 찾아가 각자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즐거움을 증진하는 방안을 함께 찾는다. 에브리바디 플레저팀은 성교육이 위험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즐거움’을 증진하는 것을 지향하며,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차별과 낙인에 맞서는 정치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모두의 즐거움’을 증진하는 것을 모토로 삼는 에브리바디 플레저팀은 성교육이 위험의 예방과 대처를 다루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의 ‘즐거움’을 지향하고 증진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과정인지 실감하고 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성교육이 이 어려움을

¹ 이 장은 다음의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타리, [“동의, 합의, 욕망 사이 - 소수자의 즐거움을 바라지 않는 사회에 저항하는 성교육”](#), 세어 이슈페이퍼, 2023년 1월 26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핵심적인 고민이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금욕과 폭력예방 중심의 성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성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다. 실제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성적 즐거움이 아닌 이유로 섹스를 하기도 하며, 동의한 섹스였지만 나쁜 섹스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들의 선택과 소통과 협상의 실패를 포함하지만 이 실패들은 각자의 능력에 매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집단의 섹스를 불법화하는 법제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사회적인 규범, 성적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젠더, 나이, 질병, 빈곤 등의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어는 성건강에 대한 정보를 차별없이 제공하고, 누구나 자신의 성적 즐거움을 찾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활동이 성적 억압에 저항하는 운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찾아가는 성교육’을 통해서 세어는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성노동자, 청소년, 중노년 여성 등과 만나 각자의 그룹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질문하고, 이들이 꺼내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성교육에서 배제되었다. 청소년을 성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성교육은 이들 전체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성교육 시간에 성소수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거나 오히려 교사의 혐오발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공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농인학교에서조차 수어를 하지 못하는 교사가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틀어주는 것으로 성교육을 대신하는 경우도 일쑤였다. 법적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성건강과 성적즐거움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소외된 집단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세어가 이들과 함께 성교육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다. 이들은 현행 법제도와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서 성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금지당하거나 사회적인 낙인을 받고 있다. 소수자의 경험이 성교육 안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던 것은 단지 수가 적거나 사소한 문제라서가 아니라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유지하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가치체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취약한 그룹을 단지 ‘특별한 보호’ 혹은 ‘특별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만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이 차별과 낙인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도전이 가능하지 않으면, 각자가 경험해온 경험이 이러한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저 각자의 능력과 정보, 기회의 부족으로만 여기기 쉽다. 따라서 소수자를 위한 성교육은 바로 성적 권리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이 자신이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적 즐거움, 만족감, 쾌감은 어떤 것일까. 오르가즘이라는 말로 수렴되기엔 부족하다. 많은 이들이 자위를 통한 즐거움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고, 신체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만족이 다르다고 느끼기도 한다.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려지는

신체적인 매커니즘 또한 성별 이분법에 근거하거나 성기중심적 정상성에 기댄 설명이 많아서 많은 이들이 이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나이, 장애, 질병, 트랜지션 등으로 인해서 각자가 느끼는 쾌감의 방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세어는 성교육을 통해서 각자가 신체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느낌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편견이나 낙인이 즐거움을 찾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대안적인 관점이 담긴 정보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즐거움을 얻기 어려운 이유의 핵심에는 사회가 소수자들이 성적 즐거움을 얻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에 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기회, 정보, 비용, 장소 등을 마련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타인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어야 하는 비용과 시간 등의 자원 또한 필요하다.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해는 사회적인 차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며 손해를 복구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바로 이러한 점이 자원이 부족하고 차별받는 이들이 성적 즐거움을 포기하도록 하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즐거움을 찾는 과정에서 낙인과 또다른 차별에 노출되어 고통을 유발한다.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로 성적 즐거움을 고민하고, 성적권리가 인권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즐거움을 권리로 만든다는 것은 구조적인 억압과 자신의 몸이 연결되는 지점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콘돔협상에서 실패해서 혹은 콘돔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원치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새삼 떠올려보자. 임신의 당사자가 겪어야 했던 일련의 고통은 낙태죄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떨어질 수 없다. 게다가 낙태죄는 혼인상황, 경제적 상황, 나이,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국적 등의 조건에 따라서 매우 다른 효과를 발휘했고, 실제로는 혼외성관계를 한 여성, 자율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성적 실천을 결정한 여성에 대해 처벌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는 국가는 성풍속을 규제하기 위해서 금전거래가 매개된 성관계를 금지하고(형법 제242조) 음화제작과 반포를 금지하며(형법 제243, 244조) 공연음란을 감시한다(형법 제245조). 정조이데올로기와 모성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젠더화된 폭력이 생산되는 구조를 사실상 국가가 만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부계혈통과 성풍속 유지를 위해서 금지해왔던 유구한 역사속에서 균형법상 추행죄(균형법 제92조6)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기능하는 것과 연결되며, 에이즈예방법 상 전파매개행위가 공중보건이 아니라 문란한 성적 행위로 인해 감염병에 걸린 이들의 성을 통제하는 것으로 작용했다(에이즈예방법 제19조). 또한 장애인, 부랑인, 홈리스, 미혼모, 성노동자를 수용하고 감금해왔던 역사는 성적 권리를 박탈하는 핵심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성적권리의 침해는 오랜 역사속에서 국가가 행해왔던 차별과 인권침해의 모습으로 소수자들의 몸에 켜켜이 쌓여왔다. 이러한 억압의 역사와 장치들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자신이 처한 부당한 경험의 출처와 원인을 이해하며 자신을 탓하지 않으면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항문섹스 배우기, 교육하기²

2011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를 통해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없어질 위기를 맞아 성소수자들이 서울시의회 농성을 시작했다.³ 그 때 농성단은 항문 섹스에 대한 혐오를 이용한 반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세력이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항문성교 배웠어요”라는 피켓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다. 물론 성소수자 학생을 항문 섹스 하는 사람으로 재현하는 의도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를 항문 성교 가르치는 조례로 환원시키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때에도 언제나 등장했던 이러한 논리들은 차별금지나 인권 자체를 동성애와 같이 ‘나쁜 것’으로 재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대중들에게 즉각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차별금지나 인권과 같은 담론과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인권’과 ‘차별금지’와 같은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동성애는 그런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반복되었다. 소위 ‘항문 성교’ 피켓이 등장했을 때 농성단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며 맞섰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에 항문 섹스를 학교에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여전히 이런 주장은 공론장으로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저 피켓을 든 사람들이 해외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도입된 이래 실제로 학교에서 항문 섹스를 가르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을 때, 포괄적 성교육을 당장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몇학년에 어떤 내용으로 항문 섹스를 다루었는지, 교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교실의 풍경과 그러한 지식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현장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좀더 편안해 졌는지 미친듯이 궁금해졌다. 적어도 나에게는 저 혐오 피켓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후회가 지금까지 포괄적 성교육을 정치적인 의미로 고민하고, 항문 섹스에 시민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게 만들었다.

² 이 장의 서두는 다음의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나영정(타리),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항문 섹스와 역량」, 『오늘의 교육』 81호, 2024.

³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책에서 참조할 수 있다. 공현, 진냥(이희진),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교육공동체벗, 2024.

항문 섹스를 배우는 것은 정치적이고 핵심적이다. 항문 섹스를 누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성감대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모두가 성기중심적인 섹스를 하거나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성과학적 지식이 상식이 된 것도 같은데 항문에는 여전히 많은 오명과 혐오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항문섹스에 대해서 모르면서 반대한다. 항문섹스를 배우지 않고, 상상해보지 않고, 욕망해보지 않고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문섹스에 대한 반대는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항문섹스를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한 반대가 되었다. 이렇게 항문 섹스는 특정한 이들(‘남성과 섹스하는 남성’)이 특별한 동기(비생식적, 비정상적 쾌락)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교육에서는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여겨진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항문 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남성과 섹스하는 남성’⁴으로 한정되지 않고, 비생식적 동기의 섹스가 모두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문 섹스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오명과 혐오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항문은 젠더, 정체성, 장애, 나이, 인종을 불문하고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며, 항문에 대한 낙인이 걷혀질 때 즐거움에 대한 지평은 크게 확장될 것이다. 이 보편성과 이로움을 부정하고 항문성교를 특정한 대상과 특별한 목적으로 한정하고 규제해온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 즐거움과 항문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면 항문 섹스에 대한 주제를 CSE 프로그램에 맞춰서 배우기 위해서 교안을 구성해보면 어떨까. 허용과 불허의 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습삼아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⁵ 이 커리큘럼을 고민해본 이유는 단지 항문 섹스를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반적인 섹스와 섹슈얼리티 교육에서 항문 섹스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필요하고, 건강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의도이다. 아래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누군가 항문섹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안 받았을때 동의할지 고민하기 위해서, 항문 섹스를 한 이후에 자신의 감정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다. 그러한 정보가 공식화되지 않고, 성교육의 자료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당사자는 혼란에 빠지고, 부정확한 정보 속에서 길을 잃는다.

⁴ ‘남성과 섹스하는 남성’(MSM, Men who have sex with Men)은 성건강을 다루는 보건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은 항문 섹스를 하는 이들을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성애자로 정체화한 남성 중에서도 성적 쾌락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과 항문 섹스를 할 수 있다. 보건학적인 관심은 항문과 음경이 결합하는 섹스가 가진 성매개감염 등의 위험도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남성’은 음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⁵ CSE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유네스코에서 제작한 국제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가져왔다.

라이프스킬 기반 HIV 및 섹슈얼리티 교육을 위해 제안된 지표는 아래와 같다.

주제 / 콘텐츠

일반적인 라이프스킬	
필수 주제	- 의사결정/자기주장 - 의사소통/협상/거절 - 인권 강화
희망 주제	- 수용, 인내, 공감, 비차별 - 기타 일반적인 라이프스킬
성 및 재생산 건강(SRH) / 섹슈얼리티 교육(SE)	
필수 주제	- 인간의 성장과 발달 - 성적 해부학 및 생리학 - 가족생활, 결혼, 대인관계 - 사회, 문화, 섹슈얼리티 : 섹슈얼리티 관련 가치, 태도, 사회적 규범, 매체 - 재생산 - 성 평등과 성 역할 - 성적 학대/원치 않는 또는 강제적인 섹스 저항 - 콘돔 - 성적 행동(성 행위, 쾌락, 감정) - 성매개 감염병 감염 및 예방
희망 주제	- 임신과 출산 - 콘돔 이외의 피임법 - 젠더 기반 폭력과 해로운 관행 / 폭력의 거부 - 성적 다양성 - 성과 재생산건강 서비스 출처/서비스 찾기 - 기타 성과 재생산 건강/섹슈얼리티 교육 관련 내용
HIV 및 AIDS 관련 특정 내용	
필수 주제	- HIV 감염 - HIV 예방 : 콘돔 사용을 포함한 더 안전한 성 행위 - HIV 치료
희망 주제	- HIV 관련 낙인 및 차별 - 상담, 검사 서비스의 출처/ 상담, 치료, 돌봄, 지원 서비스 찾기 - 기타 HIV 및 AIDS 관련 특정 내용

출처 ; UNESCO. 2013a. Measuring the education sector response to HIV and AIDS: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and use of core indicators. Paris, UNESCO.

항문 섹스는 섹스의 한 방식으로 성 및 재생산 건강/ 섹슈얼리티 교육 안에 필수 주제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성 행위, 쾌락, 감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항문섹스는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라이프스킬에서 다루는 주제들, 성 및 재생산 건강과 섹슈얼리티 교육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건강, HIV 및 AIDS 관련 특정 내용 전체에 걸쳐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항문 섹스를 다룬다면 모든 지표에서 교육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7.1 성(Sex), 섹슈얼리티(Sexuality), 생애 주기 별 성생활

학습목표(5-8세)

핵심내용 : 인간이 자신의 몸을 즐기고 일생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 육체적 즐거움과 흥분은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친근감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지식)
- ▶ 육체적인 감정 표현은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을 이해할 수 있다. (지식)
- ▶ 다른 사람에게 감정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태도)

학습목표(9-12세)

핵심내용 : 인간은 일평생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 ▶ 섹슈얼리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적, 신체적 매력을 포함한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지식)
- ▶ 인간이 신체적 접촉(예: 키스, 만지기, 애무, 성적 접촉)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
- ▶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건강한 한 부분임을 인식한다. (태도)
-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것이며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다. (태도)
- ▶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성적인 감정에 대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섹슈얼리티를 말할 수 있다. (기술)

핵심내용 : 섹슈얼리티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 ▶ 섹슈얼리티에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태도)
- ▶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찾아서 섹슈얼리티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기술)

학습목표(12-15세)

핵심내용 : 성적 감정, 환상, 욕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항상 그러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는다.

- ▶ 사람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방법을 열거할 수 있다. (지식)
- ▶ 성적, 감정, 환상, 욕구는 일상생활을 통해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고수치스러운 것이 아님을 말할 수 있다. (지식)
- ▶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감정, 환상, 욕구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지식)
- ▶ 섹스에 대한 관심은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삶 전체에 걸쳐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
- ▶ 사람들이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방법은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태도)
- ▶ 성적 감정, 환상, 욕구와 관련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기술)

학습목표(15-18세 이상)

핵심내용 : 섹슈얼리티는 복합적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윤리적, 문화적 차원을 포괄한다.

- ▶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윤리적, 문화적 요소를 포괄하는 섹슈얼리티의 복합성을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다. (지식)
- ▶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태도)
- ▶ 자신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술)

섹스와 섹슈얼리티, 생애 주기별 성생활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하고 있고, “아동시기부터 육체적 즐거움과 흥분이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친근감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5-8세)는 핵심 내용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항문을 통한 즐거움, 항문 섹스를 통한 타인과의 교감이 교과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7.2 성적 행동 및 반응

학습목표(5-8세)

핵심내용 : 사람들은 신체접촉이나 성행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 ▶ 사람들은 키스, 포옹, 신체접촉, 성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

핵심내용 :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 ▶ ‘좋은 신체접촉’과 ‘나쁜 신체접촉’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지식)
- ▶ 누군가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체를 접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태도)
- ▶ 누군가 자신에게 나쁜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줄 수 있다. (기술)

학습목표(12-15세)

핵심내용 : 성적 자극에 따라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안다.

- ▶ 성적 자극에는 신체적, 심리적 자극이 있으며 사람마다 반응하는 방법과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지식)
- ▶ 성적 반응은 질병, 스트레스, 성적 학대, 약물치료, 약물사용, 트라우마와 같은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태도)

핵심내용 : 사회, 문화, 세대에 따라 성적 행동에 대한 통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 ▶ 성적 행동에 대한 통념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다. (지식)
- ▶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정보의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다. (태도)
- ▶ 성적 행동 통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기술)

핵심내용 : 정보에 근거하여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정보에 근거한 성적 의사결정(풍부한 지식과 자신감을 갖고 언제 누구와 성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태도)

학습목표(9-12세)

핵심내용 : 사람들은 성적 자극(신체적 또는 정신적)에 의해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 성적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을 기술할 수 있다. (지식)
- ▶ 사춘기 동안에 성적 끌림과 자극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됨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
- ▶ 많은 아이들이 유아·아동·청소년기에 자위를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지식)
- ▶ 자위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롭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지식)

핵심내용 : 성행위의 시기, 방법, 파트너, 피임법 등 성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 섹스를 늦추거나 섹스를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다. (지식)
- ▶ 절제란 섹스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언제 누구와 섹스를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이것이 임신과 HIV를 포함한 성병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이해할 수 있다. (지식)
- ▶ 섹스 및 관계와 관련하여 선택한 결정이 자신의 미래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태도)

7.2 성적 행동 및 반응

- ▶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람마다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고 항상 존중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태도)
- ▶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기술)

핵심내용 :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 행위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 성 행위와 관련한 위험을 줄이고 생활 계획을 지원하는 선택이 가능함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
- ▶ 콘돔 및 기타 피임약이 의도하지 않은 성 행위 결과의 위험(임신, 성매개 감염병 등)을 줄인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
- ▶ 질과 음경이 결합하지 않는 성 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HIV와 성매개 감염병(STIs) 위험을 줄이면서 즐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
- ▶ 성 행위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생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태도)
- ▶ 정보에 근거하여 성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기술)

핵심내용 : 성매매, 성 접대 등의 성착취는 건강과 복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 성 행위 거래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다. (지식)
- ▶ 돈이나 재화의 거래를 수반하는 친밀한 관계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보다 안전한 섹스를 위한 협상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태도)
- ▶ 성 행위 거래를 줄이기 위한 단호한 대화와 거부의 기술을 보여 줄 수 있다. (기술)

학습목표(15-18세 이상)

핵심내용 : 성 행위를 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며 자신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책임이 따른다.

- ▶ 성적 즐거움과 책임의 핵심 요소를 알 수 있다. (지식)
- ▶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성적 접촉 없이 살아가는 시기가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지식)
- ▶ 좋은 대화가 성적 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
- ▶ 젠더 규범과 고정관념이 사람들의 성적 즐거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식)
- ▶ 성적 자극에 따른 신체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몸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인식 할 수 있다. (지식)
- ▶ 성적 파트너와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과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태도)
- ▶ 성적 욕구와 제한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기술)

핵심내용 : 성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HIV를 감염시키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 출산, 성적 학대, 준비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섹스를 했을 경우, 성매개 감염병 및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 인지 알 수 있다. (지식)
- ▶ 돈이나 재화를 이용한 관계는 안전한 섹스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지식)
- ▶ 원치 않는 임신과 성매개 감염병/HIV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태도)
- ▶ 원치 않는 임신, 성매개 감염병/HIV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기술)

학습목표	핵심내용	적용
5-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은 신체접촉이나 성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스, 포옹, 신체접촉, 성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고 할 때 특정한 신체 기관을 한정해줄 필요가 없다. ● ‘즐거움’을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동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부적절한 방법은 특정 신체 기관과 무관하다. 동의가 없다면 그 어떤 신체 기관도 부적절하다.
9-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은 성적 자극(신체적 또는 정신적)에 의해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성행위의 시기, 방법, 파트너, 피임법 등 성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에 따라 반응하는 방법과 시간이 다르다는 것, 성적 반응은 다양한 경험과 이슈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항문 섹스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야 한다.
12-1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자극에 따라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안다. ● 사회, 문화, 세대에 따라 성적 행동에 대한 통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정보에 근거하여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행위에 대한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성적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금전이나 물품을 교환하는 거래적 성행위는 개인의 건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문이 성적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우고 가르치려면 항문에 대한 생물학적/보건학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 항문은 얇은 점막과 수많은 주름으로 이루어져있다. 민감하고 쉽게 손상될 수 있지만 탄력성도 엄청나다. 하지만 장 내부에는 감각이 무디다. 한편 장 내부를 자극함으로써 전립샘이 자극되면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항문과 입, 항문과 손, 항문과 토이, 항문과 음경이 접촉하는 방식으로 항문섹스를 할 수 있다. 각각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할때 미리 알아둘 점, 주의할 점, 사후 관리에 대한 지식을 준비한다. https://bit.ly/항문섹스하는방법

	<p>복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문 섹스에 대한 한국사회의 통념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배우고 가르칠때 편견없이 접근할 수 있고,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항문에 대한 지식은 항문 섹스를 할때 가능성이 높은 성매개감염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며, 예방법을 알 수 있다. ● 입과 항문의 접촉을 통해서 가능한 성매개감염은 헤르페스바이러스, HPV, 매독, A형간염 바이러스, B형간염 바이러스이고, 섹스토이 공유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성매개감염은 헤르페스바이러스, HPV, 매독, 클라미디아, 임질, B형간염바이러스, C형간염 바이러스이다. 또한 음경과 항문의 접촉을 통해서는 헤르페스바이러스, HPV, 매독, 클라미디아, 임질, B형간염바이러스, HIV, C형간염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 이 중에서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은 성매개감염 12종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A.B.C형간염 바이러스와 HIV, 매독은 혈액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B형간염은 백신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HIV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예방약 요법이 있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성매개감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성적 행위를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 ● 항문 섹스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개감염이나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콘돔과 젤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젤은 특히 콘돔이 찢어지지 않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증진하는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이나 물품이 오가는 거래적 성행위에서 항문 섹스가 특별히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연령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될 수도 있고, 성소수자 혐오가 개입되어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15-18세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행위를 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며 자신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책임이 따른다. ● 성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과 성매개감염/HIV를 감염시키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자극에 따른 신체 반응이 어떠한지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상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상처나 성매개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항문 섹스 이후 상처가 나서 불편감을 느끼거나 피가 날때, 발열이나 발진이 날때 맘편히 갈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항문 섹스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장을 씻어낸다(일명 센조이). 센조이는 항문섹스에 필수가 아니며, 얼마나 깊이 씻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준은 없다. 항문은 미온수로 씻고 비누를 이용해도 좋지만서 항문 안쪽은 수도물이나 식염수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센조이를 너무 오랫동안 하거나 강한 수압으로 하다가 장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섹스를 하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대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절대 타인에게 보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섹스 도중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섹스를 하다보면 변을 보게될 날은 언젠가 올 수 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상황이 왔을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파트너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안감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부담을 삽입받는 사람에게 전가하지

		<p>않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너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국엔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이후를 어떻게 기대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콘돔이나 라텍스 장갑을 이용하고, 수건이나 여분의 천을 깔고 시작하는 것, 그것을 구비하고 빨래하는 것을 평등하게 나누기도 매우 중요하다.</p>
--	--	--

<효과적 CSE 커리큘럼의 특성>

표 4. 효과적 CSE 커리큘럼의 특성	
준비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섹슈얼리티, 행동 변화 및 관련 교육이론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 2. 청소년, 부모/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참여 3. 프로그램 대상자인 아동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적, 성 및 재생산건강(SRH) 요구 및 행동 평가 4. 커리큘럼 개발 및 실행에 필요한 자원(인적, 시간적, 재정적) 평가
내용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내용, 접근방법, 활동 결정을 위해 명확한 목표, 결과, 주요 학습에 집중 6. 논리적 순서에 따라 주제 다루기 7. 맥락적,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활동 기획 8. 동의 및 라이프 스킬 다루기 9. HIV 및 AIDS, 기타 성매개감염병(STIs), 임신 예방, 조기 및 의도하지 않은 임신, 다양한 보호 방법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10. 생물학적 경험, 성별, 문화적 규범이 아동청소년 자신의 성 행위와 성 및 재생산건강(SRH) 경험 및 처리 방식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 다루기 11. 특정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위험 및 보호 요소 다루기 12. HIV 감염, 기타 성매개감염병(STIs), 원치 않는 또는 비보호적인 성적 삽입 및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 다루기 13. 콘돔 및 피임 전반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또래 규범 다루기 14.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요구, 특히 성 및 재생산건강(SRH) 요구에 부응하는 사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내용 개발 항목	메모
내용, 접근방법, 활동 결정을 위해 명확한 목표, 결과, 주요 학습에 집중	안전하고, 건강하며 긍정적인 관계 뿐 아니라 인권, 성평등,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u>긍정적 가치를 형성하는 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u> 아동·청소년의 서로 다른 연령, 성별, 특징(예 : HIV, GBV 또는 원치 않은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논리적 순서에 따라 주제 다루기	대부분의 효과적 커리큘럼은 안전, 건강, 긍정적인 라이프스타일 개발에 필요한 특정 지식, 태도, 기술을 다루기 전에 <u>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치, 태도, 규범을 탐구하고, HIV, 성병(STIs), 의도하지 않은 임신 예방 및 학습자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u>
맥락적,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활동 기획	학습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가족과 지역사회의 가치, 종교 및 기타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u>학습자의 환경에 적절한지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 및 지역사회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 섹슈얼리티 및 관계에 대한 가족, 지역사회, 또래집단의 인식 측정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u>
동의 및 라이프 스킬 다루기	<p>동이에 대한 교육은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 구축과 성적인 건강을 장려하고, 잠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성적인 행동에 참여 또는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IPPF, 2015b). 동이에 대한 양질의 교육은 청소년들이 위험을 판단하고, 원치 않는 성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지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개발하도록 돕는다.</p> <p><u>아동·청소년에게 위험 판단, 협상 능력과 같은 라이프 스킬은 필수적이다. 위험 판단 기술은 학습자가 부정적 또는 원치 않는 성 및 재생산건강(SRH) 결과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를 파악하고, HIV의 영향, 기타 성매개감염병(STIs)와 원치 않는 임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증언, 시뮬레이션, 역할 연기는 모두 통계와 기타 사실적인 정보의 보완책으로 사용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위험, 민감성, 심각성의 개념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상 기술은 아동·청소년들이 성행위 참여에 대한 또래집단의 압력, 성행위 결정과 함께 증가하는 콘돔과 현대적 피임법 사용 등과 같은 성적 활동 시작 연령을 늦추는 보호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데</u></p>

	<p>필수적이다. 협상 기술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섹슈얼리티에 대한 대화와 합의에 도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여러 일반적 상황에 대한 역할활동은 점차 복잡해지는 시나리오를 통해 파악된 기술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가르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p> <p><u>콘돔 사용 방법을 보여주고, 콘돔을 구할 수 있는 장소에 가보는 것 또한 협상 기술 수업 방법으로 사용된다.</u></p>
<p>HV 및 ADS, 기타 성매개감염병(STIS), 임신 예방, 조기 및 의도하지 않은 임신, 다양한 보호 방법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p>	<p>커리큘럼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여야 하며, <u>콘돔과 다른 피임법(전통 및 현대)의 위험 또는 효과에 대해 과장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현대적 피임법, 특히 응급 피임 및 여성 콘돔 또는 노출 전 예방요법(PrEP)와 노출 후 예방요법(PEP)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u> 금욕만을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인 접근법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금욕에 대한 프로그램은 성교, 동성애, 자위, 낙태, 성역할 및 기대, 콘돔 및 HIV와 같은 주제에 대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UNFPA, 2014).</p>
<p>생물학적 경험, 성별, 문화적 규범이 아동청소년 자신의 성 행위와 성 및 재생산건강(SRH) 경험 및 처리 방식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 다루기</p>	<p>생물학적 경험, 젠더와 기타 문화규범은 일반적으로 섹슈얼리티와 성 및 재생산건강(SRH) 관련한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월경은 많은 여자청소년에게 중요한 생물학적 경험이다. 그러나 일부 가난한 지역 여자청소년의 경우, 월경과 관련하여 성차별을 강화하는 고유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Secor-Turner 외, 2016). 성 차별은 일반적이며 관계 속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갖는 권력이나 통제력이 낮아 남자청소년, 성인남자, 특히 나이든 남성들에 의한 강요, 학대, 착취에 더욱 취약해지도록 만든다.</p> <p>성인남성과 남자청소년은 남성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예 : 신체적 힘, 공격적 행동, 성적 경험)을 충족하고 유해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또래들로부터의 압력을 느낄 수도 있다.</p> <p>평등한 관계의 효과적 증진과 위험한 성 행위의 감소를 위해 커리큘럼은 이와 같은 생물학적 경험, 성불평등, 고정관념을 다루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u>프로그램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들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원치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성행위를 피하는 효과적인 기술과 방법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성불평등, 사회적 규범,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u></p>
<p>특정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p>	<p>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위험 및 보호 행동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CSE 프로그램은 다양한</p>

<p>위험 및 보호 요소 다루기</p>	<p>형태의 보호 행동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V 및 기타 성매개감염병(STIs) 예방 : <u>청소년들은 성기 결합을 하지 않거나, 모든 파트너와 성기 결합을 할 때마다 올바른 콘돔 사용을 해야 한다. 특정 효과적 프로그램은 동시다발적인 성관계를 피하고, 한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u> 또한 일부 국가는 ‘돈 많은 중년남자들(sugar daddies, 성관계를 대가로 자기보다 훨씬 젊은 여자에게 많은 선물과 돈을 안겨주는)’에 대한 위험성과 콘돔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는 동시다발적인 파트너와 관련된 위험의 증가와 같은 문화적 메시지를 강조한다. <u>HIV를 포함한 성매개 감염병(STIs)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권장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커리큘럼과 내용과 교사는 청소년들이 콘돔, HIV 검사, 노출 전 예방요법(PrEP)와 노출 후 예방요법(PEP)를 포함한 HIV 예방 통합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 및 노출 전 예방요법(PrEP)과 같은 가장 최근의 생물학적 예방 기술을 포함한 HIV 예방에 대한 최신 과학 및 연구를 따라야 한다(UNAIDS, 2016).</u> - 임신 예방 : 청소년들은 성적 관계를 피하거나 섹스를 할 때마다 매번 현대적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성 및 재생산건강(SRH)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두어야 한다. - 젠더 기반 폭력 및 차별 방지 : CSE 프로그램에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행동의 변화 방법과 여성에 대한 유해한 관행의 변화요구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포함해야 한다. <p>위험과 보호 요소들은 성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청소년 친화적인 건강 및 사회적지원 서비스 접근과 같은 외부적인 것 뿐 아니라 인지적, 심리사회적 요소가 포함된다. 커리큘럼 기반 프로그램 특히, 학교 기반 프로그램은 재생산 건강 서비스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적·인지적 요소에 집중한다. 섹슈얼리티 교육에서 강조되는 지식, 가치관, 규범 등은 사회적 규범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규범의 모델이자 강화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p>
<p>HV 감염, 기타 성매개감염병(STIS), 원치 않는 또는 비보호적인 성적 삽입 및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p>	<p>이상적으로는 청소년 자신의 참여와 함께 원치 않는 성행위 압박을 받을 위험이 있는 특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거나 협상하기 위한 전략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동의 및 원치 않는 상황에서 행동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지 않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u>보호되지 않는 성행위가 약물 또는 음주와 관련된 지역사회에서는 약물 및 음주가 성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u></p>

<p>특정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 다루기</p>	
<p>콘돔 및 피임 전반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또래 규범 다루기</p>	<p>개인의 태도와 또래 규범은 콘돔 사용과 피임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CSE 커리큘럼은 콘돔 및 현대 피임법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와 그것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CSE는 학생들이 콘돔과 현대 피임법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탐구하고, 사용에 대한 인식의 장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CSE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제공한다. <u>예를 들어, 콘돔을 획득과 소지의 어려움, 파트너에게 콘돔 사용을 요구할 때 있을 수 있는 당혹스러움, 또는 실제 콘돔 사용 관련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u></p>
<p>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요구, 특히 성 및 재생산건강(SRH) 요구에 부응하는 사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p>	<p>효과적인 CSE 커리큘럼에는 섹슈얼리티와 관계에 대한 상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청소년 친화적인 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월경 건강관리, 현대 피임법과 임신 테스트, 인공임신중절(법적), 성매개감염병(STI) 및 HIV 예방, 상담, 검사 및 치료,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 접종, 자발적 포경수술(VMMC) 및 여성 할례(FGM/C) 예방과 결과 관리 등을 포함한다.</p> <p>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에서는 정보에 기초한 동의와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청소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방해하는 기존의 법률 체계에 대해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보호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커리큘럼을 통해 학습자는 일부 청소년이 자신의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지리적 위치, 혼인 상태, 장애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성 및 재생산건강(SRH) 서비스 장벽을 생각해보고, 보호 제공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해 배움으로써 또래집단 또는 파트너가 성 및 재생산건강(SRH)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p>

위에서 제시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떠올려본다.

- 나는 긍정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목표를 세웠는가.
- 학습자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개인 및 지역사회, 또래집단의 인식 촉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했는가.

- 아동청소년이 위험 판단과 협상 능력과 같은 라이프 스킬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마련했는가. 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증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가.
 - 콘돔 사용과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콘텐츠를 알고 제시했는가.
 - HIV 예방을 위해 콘돔 외에 다른 수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사회 현실로 인해서 다른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이 성인과 성행위를 할때 놓일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피하거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를 했는가.
 - 음주 및 약물이 성행위와 매개되었을 때 생기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처방법을 알고있는가.
- ❖ 세어가 제작한 콘돔 구입과 사용, 약물/수술 등의 임신중지 방법, 항문섹스, 산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위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어, 영어, 태국어, 아랍어가 포함된 콘텐츠도 있음) <https://srhr.kr/SRHR01>
 - ❖ 임신중지와 유지를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작한 인터랙티브 페이지도 있습니다. <https://www.byyourside-share.org/>

4. 나가며

포괄적 성교육의 의미를 질문하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시급한 한가지 방법은 성교육이 필요한, 성교육에 참여한, 성교육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경험을, 고민을 듣는 것이다. 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욕망과 경험에 대해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욕망과 경험에 대해서 경청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낙인없는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람과 기관이 필요하다. 도서관에서 책이 치워지면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단할 수 없는 노력이다. 사람책이 치워지지 않도록, 삶이 치워지지 않도록 버티고, 더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 구전을 통해서 어떤 책과 어떤 정보와 어떤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알려야 한다. 이러한 지식이 인권과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회적 인식이 도달하여 정부가 제작한 공식 사이트에, 교과서에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질문과 정보, 증언과 시나리오가 실릴 때까지 인권과 건강을 위해서 중단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다.

지적자유,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과제 :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 사태를 중심으로

정원옥 (문화연대 집행위원)

‘금서 민원’과 검열의 제도화

최근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는 ‘금서 민원’에 시달리는 한편, 상위기관의 검열 명령도 따라야만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도서관인의 입장에서는 ‘금서 민원’도, 검열 명령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며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도서관인의 윤리이기 때문이다.¹

민원인들의 외압이 도서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만큼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계, 독서 및 출판단체 등은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2023.7.31.)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에서 도서관 지적 자유를 언급한 첫 성명서로, 책 생태계가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외압과 검열의 강도는 수그러들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도서관들은 이른바 ‘금서 전쟁’ 중이다.

¹ 지적 자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독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 개념을 확장해왔다. 지적 자유에 대한 미국 도서관계의 입장은 「도서관권리선언」, 「윤리강령」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상 통제 및 검열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도서관권리선언」에서는 창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도서관 자료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도서관 이용 권리는 출신, 나이, 배경, 견해 등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사서의 지적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에 헌신하는 전문직으로서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김신영,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양상과 대처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2024, 191~192쪽.

‘금서 민원’을 제기하는 신청인의 다수는 보수 학부모단체와 우파 기독교단체들이다. 보수우익단체들은 도서관 현장, 국민신문고, 상위기관 등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음란유해도서’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적 규모로 운동을 키워나가고 있다. 보수우익단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은 ‘금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주로 보수 정당 소속의 지자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이다. 이들은 지자체 및 교육청 관할 도서관에 직접 검열을 지시하거나 성평등·성교육 도서 비치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압박하는 등 실질적으로 검열을 제도화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는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열람 제한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실상은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왜 지금,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금지와 검열일까? 책을 검열하는 보수우익단체의 운동과 보수 정당 정치인들은 어느 지점에서 연계되고 공조하는 것일까?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의 제도화에 시민사회는 어떻게 저항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금서 민원’과 검열의 제도화가 어떻게 연계되어왔는지, 그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수우익단체가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보수 정당 정치인이 이를 받아서 검열을 제도화하는 패턴은 2020년 여성가족부의 ‘나다움어린이책 회수 사건’에서부터 반복되어온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여성가족부는 일부 초등학교 도서관에 배포한 ‘나다움어린이책’ 중 7종 10권에 대해 “문화적 수용성 논란이 있다”라는 이유로 회수 결정을 내려 논란을 낳았다.² 당시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도서들이 동성애를 조장·미화하고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고 교육부 장관을 질타한 지 하루 만에 취해진 조치였다. 이 책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이하 분학연)이라는, 우파 기독교단체에서 시작되었다. 분학연이 나다움어린이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펜앤드마이크’, ‘크리스천투데이’ 등 보수 매체들이 사안을 키웠고, 보수우익집단의 ‘검열하라!’라는 목소리에 응답한 정치인이 김병욱 의원이었다.³

² 회수 대상 책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담푸스, 2017),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고래가침쉬는도서관, 2018), 『걸스토크』 (시공주니어, 2019),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핑이』 (키즈엠, 2014),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고래이야기, 2018),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시금치, 2016), 『우리가족(엄마·아빠·딸·아들) 인권선언』 (노란돼지, 2018) 7종 10권이다.

³ 「여가부 ‘성교육 책’ 회수, 시작은 전광훈 지지 기독교단체」, 『오마이뉴스』, 2020.8.28.

2023년 도서관이 ‘금서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도 유사한 패턴이다. 5월경부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보수 학부모단체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전화를 걸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열람 제한 및 폐기해야 한다는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보수 정당 소속 지자체장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7월 25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낮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으로 교육 목적에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도서 10권에 대해 “도내 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충남에서 시작된 ‘금서 민원’과 검열의 제도화가 곧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단체가 지목한 ‘유해 도서’ 목록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나다움어린이책’ 목록과 거의 유사하다. 성평등·성교육, 페미니즘 등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도서들이 그것이다.⁴ 주목할 점은 민원인들이 ‘유해 도서’의 폐기만이 아니라, 이 도서를 구입한 자료선정위원회나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을 징계해달라고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⁵ 자료선정위원들을 위축시키고 도서관의 자기 검열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히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들어와서 ‘금서 민원’과 검열의 제도화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2,528권의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관련 도서가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3년 11월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라는 두 차례의 공문을 발송하고, 2024년 2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도서관들을 압박함에 따라 빚어진 대규모 검열 사태라고 할 수 있다.⁶

검열의 제도화는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13일에는 충남도의회가 도서관에서 ‘유해자료’를 배제하겠다는 「충청남도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사회를 경악하게 한 것이다. 개정 이유는 “건전한 독서자료 제공 및 자료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에 부적합한 자료 구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도서관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적시되었다. ‘부적합한 자료’를 검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한발 물러서기는 했으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 재상정하겠다”라면서 검열의 제도화를 계속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⁷

⁴ ‘나다움어린이책 회수 사건’에서 회수되었던 책의 목록,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꽃할머니』(사계절, 2015), 차별받는 사람들과 정의를 위해 싸운 여성 변호사의 삶을 담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함께자람, 2023), 사춘기를 겪는 여성 청소년들의 일상과 경험, 마음을 들여다본 『Girls’ Talk』(시공주니어, 2019) 등이 포함되어 있다.

⁵ 「도서관은 어떻게 금서 전쟁에 휘말렸나」, 『시사IN』, 2023.10.25.

⁶ 전교조 경기지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2024.6.12.

⁷ 「도서관에서 ‘유해자료’ 빼겠다는 충남도의회, ‘금서 조례’ 논란」, 『오마이뉴스』, 2024.8.23.

살펴본 것처럼, 최근 도서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은 보수우익단체의 ‘금서 민원’으로 시작되고, 이를 명분으로 보수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검열을 압박하거나 제도화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렇듯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가 정치권과 연계되고 공조하면서 도서를 검열하는 것이 새롭거나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검열의 제도화: 혐오와 차별의 제도화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지적자유사무국(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에서는 해마다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도전받은 책’에 대한 정보를 접수,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서현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6,666권의 도서가 도전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전받은 책들의 71.3%는 아동용 혹은 10대 청소년 대상 도서였으며, 도전받은 이유로는 해당 도서가 ‘연령집단에 부적절’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묘사가 지나침’, ‘종교적 관점을 반영함’, ‘반사회적 내용을 다룸’ 등의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⁸

‘도전받은 책’의 지표가 말해주듯, 미국에서도 아동도서는 다양한 이유로 쉽사리 검열의 표적이 된다. 그 가운데서도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 문제 도서를 제거하는 형태의 검열은 가장 “극단적 형태의 검열”이며 “지적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로 분류된다. 그 이유는 어린이를 어른에 의해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대적 시각 때문이다.⁹ 피터 베리(Peter Barry)는 아동문학에 대한 검열을 ‘검열의 계몽성’이라고 명명한다. 아동문학 작품을 검열함으로써 검열자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정치적 목소리를 드높이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아동문학과 도서 관련자인 ‘어른’을 ‘계몽’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¹⁰ 베리는 아동도서에 대한 검열을 두 가지 양태로 구분한다. 변화한 시대 현실에 맞추어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도서를 도서관에서 금지시켜야 한다는 ‘진보적 검열’(liberal censorship)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가족 중심 가치나 도덕적 가치에 입각해 청소년의 성, 마약, 폭력 등을 다루는 책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보수적 검열’(conservative censorship)이 있다. 제시카 예이츠(Jessica Yates)는 아동문학에 대한 검열을 ‘도덕적 검열’과

⁸ 이서현, 「미국도서관협회의 ‘금서 주간(Banned Week)’ PR활동 연구: ‘도전받은 책(Challenged Books)’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3-4, 2017.

⁹ 이우학, 「미국 아동문학과 검열」, 『동화와번역』 20, 2010. 309쪽.

¹⁰ Peter Barry, “Censorship and children’s literature: some post-war trends” in Writing and Censorship in Britain, Paul Hyland and Neil Sammells(eds), London: Routledge. 1992.; 이우학, 위의 글, 310쪽 재인용.

‘정치적 검열’로 나누기도 한다. 도덕적 검열은 “성적 자극, 폭력, 죽음과 초자연적 공포”로 인해 어린이를 “정서적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행되는 반면, 정치적 검열은 “타인이나 단체를 증오하여 배척”하는 경우와 “정부에 의한 도서 통제”를 의미한다.¹¹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은 ‘보수적 검열’이자, ‘정치적 검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보수우익단체들은 ‘유해도서’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금서 민원’의 숨겨진 의도는 어른과 사회를 ‘계몽’하려는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보수 정당 정치인과 관료들이 ‘금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검열을 제도화하는데 앞장서는 이유 또한 일맥상통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검열의 제도화가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과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의 제도화는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과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금서 민원’과 검열의 제도화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양상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도 도서 검열·금지와 제도화를 시도하는 세력은 극우 성향의 학부모단체들이다. 전누리에 따르면, 근래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내 도서에 대한 검열·금지 시도 그리고 그 제도화의 배후에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존재한다. 바로 극우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보다 체계적인 도서 검열·금지의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화당과 깊은 연계를 맺으며 정력적인 활동을 펼친다. 나아가 도서 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학군의 교육위원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위원 선거 출마를 독려하고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¹²

전누리는 미국의 도서 검열·금지 시도가, 학교와 교실 내에서 인종, 성 소수자 등 특정 내용의 교육 내지 언급을 금지하려는 법안 제정 시도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1년 1월부터 주 차원에서 인종, 성별, 섹슈얼리티 등 특정 내용을 교육에서 금지하고 교육기관에 이념적 통제를 가하는 법안 발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들도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자료 또는 도서관 도서에 대한 학부모 내지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높인다면서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공공 웹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 도서관을 검사하고 도서를 제외시킬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이의제기 절차나 정치적 기구를 구성하는 법, 도서 라벨링을 통한 제한 조건 등을 두고 나아가 학부모에게 자녀의 도서관 활동 모니터링 및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¹³

¹¹ Barry, 233; Jessica Yates, Censorship in Children’s paperbacks in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vol.11, no.4, 1980, 180~81.; 이우학, 위의 글, 313쪽 재인용.

¹² 전누리, 「책을 검열하는 미국의 극우운동: 미국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금지 전쟁」, 『오늘의 교육』 81, 2024, 151~154쪽.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이 성 불평등, 성 소수자와 관련한 법·제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나다움어린이책 회수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은 차별금지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어 있던 때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⁴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직후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세 개의 법안이 더 발의되었을 정도로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22대 국회에서도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¹⁵

‘금서 민원’을 제기한 보수우익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단체들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비롯해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지자체 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 UN 포괄적 성교육 반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및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저지, 낙태법 헌법 불합치 이후 태아 생명 보호 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보수개신교 기반 단체들이다. 여성과 성 소수자의 권리보장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이들 단체가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검열하라는 데 앞장서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성과 성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반대하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학부모 권리를 내세워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문제 삼는 것이기에 그들은 ‘금서 민원’과 검열 제도화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에 호응하는 보수 정치인들과 관료들 역시 여성과 성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데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요컨대,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여성과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¹³ 전누리, 같은 글, 148~150쪽.

¹⁴ 201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했다. 재출범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2018년과 2019년의 평등행진, 차별잇수다, 2020년 전국순회 평등버스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 성사 이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 시민공청회, 오체투지와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평등길1110 도보행진, 2022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까지 대국회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https://equalityact.kr/>)참조.

¹⁵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2024.6.4.

좌편향·왜곡도서에서 음란·유해도서로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금서 민원’과 검열의 제도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여 문제가 되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하 ‘블랙리스트 사건’)¹⁶을 떠올리게 한다. 도서관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는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 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은 전국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추천도서 선정 기준 및 과정을 강화하고 폐기 여부를 자체 결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뒤, 한 보수우익단체가 ‘좌편향·왜곡도서’로 지목한 책들이 도서관에서 폐기되자 출판계와 저자, 사서들이 “도서 검열과 출판 탄압”이라며 반발한 적이 있다.¹⁷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촛불혁명’ 등과 관련된 책 구매와 대출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서 파문을 낳기도 했다.¹⁸

주로 ‘좌편향·왜곡도서’를 지적하였던 보수우익단체들이 ‘음란유해도서’ 공격으로 방향을 바꾼 일, 그리고 ‘좌편향·왜곡도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의 실행과 ‘음란유해도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검열 제도화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검열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 도서에 대한 검열을 통해 혐오와 차별, 배제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¹⁶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저지른 위헌적 범죄를 통칭하는 말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원회 활동보고서 1』, 2019. 20쪽).

¹⁷ 「도서관에 황당한 ‘분서갱유’ 강요하는 정부」, 『한겨레』, 2015.6.11.

¹⁸ 안양시 공공도서관 운영을 담당한 평생교육원은 2017년 3월 24일 10개 도서관에 비치된 68권의 정치 관련 도서 구매 목록을 제출받은 뒤, 이런 책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책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지 말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 도서관, 문재인·촛불 관련 책 구매·이용 막았다」, 『한겨레』, 2019.10.19.

어떤 도서가 음란하며, 유해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도서의 유해성을 심의해 달라는 여러 단체와 기관의 요청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가 논란의 중심으로 소환되고 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는 시중에 출간된 성교육 책 68권(66종)에 대해 유해성을 심의해달라고 간윤에 요청했다. 간윤은 올해 4월 한 권만 ‘청소년유해간행물’이라고 결정하였으나, 6월에는 재심으로 그 결정을 번복하여 결국 모든 책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¹⁹ 보수우익단체들은 이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간윤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우익단체가 검열기구인 간윤 폐지를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간윤을 통한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온 제도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제도 개선안에서 간윤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규제보다는 민간중심의 자율 규제를 통한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²⁰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여성계, 청소년계는 (가칭) 출판물자율심의위원회의 설립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민간 주도로 자율 규제를 하되, 공적 기관의 관리를 받는 방식으로 심의제도를 바꾸자는 것이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²¹

윤석열 정부에서 ‘금서 민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부 지자체들이 검열의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되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깊다. 과거청산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인과 역행, 지연을 거듭하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블랙리스트 과거청산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많은 과제를 남기기도 하였는데²²,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과거청산의 성과가 부인되고 역청산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이 있는 유인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책임이 있는 용호성이 차관으로 임명된 일이다. 이 지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된 블랙리스트 사건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다만,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성평등·성교육 도서의 검열을 막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이 사태가 블랙리스트 사건의 반복이자, 블랙리스트 과거청산의 ‘역청산’으로 보인다는 점은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¹⁹ 「『보수시민단체 표적』 스웨덴 성교육 책, ‘유해도서’ 명에 벗었다」, 『한겨레』, 2024.6.26.

²⁰ 문화연대,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보수단체는 근거 없는 금서 지정 요청을 중단하라!」, 2023.7.26.

²¹ 정원옥,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민간자율심의제도 제안」, 『출판문화』 643, 2019.8.

²² 정원옥, 「블랙리스트 사건은 극복되는 중인가: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5주년의 진단과 과제」, 『문화과학』 109, 2022, 211~217쪽.

‘좌편향·왜곡도서’목록이 블랙리스트였듯이, ‘음란유해도서’ 목록 또한 그 자체로 블랙리스트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것이 국가범죄라는 것은 블랙리스트 과거청산을 통해 이미 인정된 것이다. 이 말은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의 제도화가 향후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진실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²³ 현재로서는,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내외 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자유 보장을 위한 국내외 기준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21조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3항에서도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권”을 가진다.

국제도서관협회및기관연맹(IFLA)은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1999)에서 “지적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도서관과 정보 전문직의 핵심적인 책무”임을 강조하였고, “도서관은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 조직, 배포하며 어떠한 형태의 검열에도 반대한다”,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이 자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종, 신념, 성별, 연령, 그 외의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개정판」(2022)에 따르면, “검열에서 자유로운 광범위한 정보 및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수준의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삶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지식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사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자유는 도서관 관련 법제에 보장되어 있다. 「도서관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²³ 블랙리스트 이후,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권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2024.8.6.

한국도서관협회가 개정·발간하는 「공공도서관기준」(2013)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자료선택은 인종, 민족, 국적, 직업, 종교, 사상, 당파, 지방적 관습 등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어떤 형태의 이념적·정치적·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개인 및 단체 이용자의 이력, 자료이용, 정보검색, 정보조사 및 제공 등과 관련된 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단체 및 사정기관의 어떠한 정보요구나 정보공개 요청도 거절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2019)에서도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신영이 잘 요약한 바에 따르면, 지적자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도서관 철학의 토대이자 사서직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로서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개인은 제한 없이 모든 관점에서 정보를 찾고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서직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제공하며, 검열에 반대하고 사상의 자유를 증진하는 주체로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일부 개인과 집단이 전통적 관습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포함한 지식, 상상력, 아이디어 및 의견을 담고 있는 도서관 자료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배제·폐기하지 않는다.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가 어떠한 사상이나 주장을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도서관 및 도서관 직원이 그것을 지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²⁴

맺음말: 지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과제

도서관에 대한 검열·금지 시도와 제도화는 사상에 대한 통제일 뿐만 아니라, 책 생태계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저자들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출판사들은 출판의 자유를 억압당하며, 사서들은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당한다. 학교, 교사, 학생,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은 알권리와 교육권, 독서권, 문화 향유권을 침해당한다. 도서관 검열을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자유의 침해는 문화 다양성과 인권 감수성을 훼손시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배제가 고착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과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긴급히 요청된다.

²⁴ 김신영, 앞의 글, 194~195쪽.

김신영은 각 주체별로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지침’을 심의·의결한 후 관계기관이 수립·적용하도록 하는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법」의 일부 개정을 전제로 가칭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한국도서관협회는 지적자유전담팀을 신설하고, ‘관종별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개별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에 지적자유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고 자료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을 유지하되, 민원이 제기된 자료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⁵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도서 검열의 금지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도서 검열도 법 제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진상조사위가 권고하였던 간윤의 폐지는 표현의 자유 확장과 도서 검열을 위해 지금이라도 이행되어야 한다. 간윤을 검열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검열기구는 행정기관이라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간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문체부가 여전히 도서를 검열하는 실질적 주체라는 것이다. 국가가 도서를 검열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안은 출판물에 대한 심의를 민간에 맡기는 것뿐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간윤의 폐지와 (가칭)출판물자율심의기구의 설립은 도서 검열의 역사를 끝내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만으로 도서에 대한 검열·금지 및 제도화 시도를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렵다. 현재도 지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제도들이 있지만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서 검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운동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는 금서 읽기 주간, 금서 읽기, 금서 전시와 축제 등을 더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확산해 검열 담론을 전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평등·성교육, 페미니즘 도서에 대한 금지와 검열의 제도화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과 성 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혐오 발언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처벌을 중심으로 한 규제보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사회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혐오와 편견에 대항하는 소수자들의 대항역량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의 개입은 그 자체가 해결책인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집단의 새로운 주체화와 정치화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정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²⁶

²⁵ 김신영, 같은 글, 212~213쪽.

²⁶ 한상원, 「혐오발언 규제 논쟁과 인권의 정치」, 『시대와 철학』 32-1, 2021, 324쪽.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지적인 능력 제고를 위한 생각의 자유를 위해서는 토론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주제에 대한 표현과 발화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지적으로 월등하므로 남들을 위해 결정함을 의미한다. 어떠한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요컨대, “모든 의견은 들려야 한다.”²⁷

²⁷ 이호규, 「모든 의견은 들려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1, 2021.18~19쪽.

[충남] 토론문

: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충청도 공직자가 시민을 인권침해하는 것에 대해

장규진 (전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분들 혹시 삼체를 보셨나요?

넷플릭스에 공개된 SF 장르 드라마입니다. 중국 물리학자가 군중들의 조리돌림 끝에 사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대혁명입니다. 마오쩌둥에 의해 문화대혁명에 선동되었던 군중들은 조반유리를 내세워 다른 사상을 배격, 각종 서적과 문화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1933년에는 ‘비독일인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나치 괴벨스에 의해 책이 불태워졌습니다. 결국, 많은 비독일인 및 장애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오래전 진시황이 일으킨 분서갱유 또한 지도자에 의해 일으킨 사상 탄압과 인간 학살입니다.

지금 충남에서는 한국판 분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기독교인들에 의해 성평등 도서를 퇴출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작년 5월 한경석 서천군의회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도서에서 자극적이거나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하고, 통념상 허용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도서인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면 도서검열을 강화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해 7월 도의회에서 지민규 도의원이 성교육 책이 과도한 성적표현과 그림이 삽입돼 있다며 대처를 촉구하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해당 도서를 별도 공간에 비치해 열람을 제한했다고 답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 발달 수준에 맞지 않거나 교육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앞으로 교육청 내 성교육과 도서 업무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도서 구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차제연에서는 일부 보수기독교인들과 선출직 공직자가 문제제기한 성교육 도서를 읽어봤습니다.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충남차제연에서는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평등 책을 퇴출하는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총 4회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이 책이 왜 퇴출당하여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오히려 여성 청소년이 외모 꾸미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편견이나 ‘즐기기 위해서만 섹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라며 책임감 있는 섹스가 중요하다고 알려주지만 정작 피임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쉬워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성평등도서 퇴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충남도의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3개월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박정식 도의원은 작년 12월 도의회에서 남자 며느리 받고 싶냐며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서산시의회에서는 가선숙 시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UN 아동권리협약이 통과되었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협약을 이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해도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눈에는, 동료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시민 기준에 한창 부족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존재로 보는 듯합니다.

도서관의 성평등도서 퇴출은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점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는 민주주의를 이해한다 보나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인권입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을 통해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선출직 공직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여,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한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충남도도서관 및 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 합니다.

결국 분서 후에는 결국 갱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나치의 베를린 분서 및 인간 학살,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모두 정치인에 의해 사상억압 및 인간 학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를린 베벨광장에 쓰이는 하이네의 글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책을 불태우는 자는 결국 사람까지 불태운다.”

[인천] 토론문

기선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현황과 경과 : 검열과 차별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간을 지나며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3월부터 인천 공공도서관의 성평등·성교육도서(이하 성평등도서)에 대한 소장 및 비치, 대여 현황을 파악해 왔다. 학교 도서관을 제외한 90여 곳의 공공도서관 중 평등과 민주주의 가치에 있어 추천 도서로 권장된 바 있으나 퇴출 움직임의 타깃이 되는 성평등 도서*(우선 여성가족부가 2020년 회수 결정을 한 바 있는 10종의 도서를 대상으로 시작했다)를 고루 비치하거나 이에 대한 열람 및 대출 제한이 없는 도서관은 드물었고 자치구별 편차도 심했다. 특히 인천교육청, 부평구청, 미추홀구 운영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뚜렷한 성평등 도서 제한과 제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도서관을 통해 자치 구청, 인천시청, 인천교육청과 같은 운영 주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과 과정에 대한 답변과 재배치를 요구해 오고 있다.

전화 문의를 통한 현장 운영 주체의 설명과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가운데 부평구청은 묵묵부답과 변화 '없음'으로, 인천교육청은 일부 도서관에서 재비치를 비롯해 열람이나 대출 불가가 제한 열람과 대출 가능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으나 자료심의위를 열어 '제한유지 결정'을 했음을 알려오기도 했다. 그 외 성평등도서 퇴출 및 제한을 해온 도서관들은 도서관 운영위나 자료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임을 알려왔는데 그 중 미추홀구의 경우는 구청장의 직인과 함께 '구도서관 운영위를 열어 부적절함과 아동에게 유해함을 심의·의결하여 해당 도서에 대한 제한 대출과 제적'한 바 있다는 공문으로 답변했다.

현재는 대상 도서를 늘려가며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국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지역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게 활동 과정과 기록을 공유하면서 각 지역의 대응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기록한 대응매뉴얼을 준비 중이며, 자세한 현황과 공동행동은 현황 파악과 대응을 준비 중인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성평등도서 문제가

드러나자마자 그 심각성만큼이나 다양하고 힘 있게 펼쳐지는 전국의 공동 행동들에 인천 역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의식과 과제 : 검열은 침묵을 만들고 침묵은 복종을 만든다

성평등 도서에 대한 집단 민원 조직에서부터 도서관의 자료심의위원회와 운영위에 대한 징계 요구, 나아가 대표적 검열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호출하고 급기야는 구체적인 삶의 장소인 지역에 검열을 안착시키는 조례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검열과 배제를 제도와 민주주의의 이름을 훔쳐 가며 인권의 원칙을 훼손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이 사안에 대응하며 주목하게 된 문제점은 첫째로 존엄과 평등, 자유와 연대라는 인권의 가치와 보편적 권리의 훼손이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장소가 아닌 곳이 없다. 하물며 도서관은, 앞선 발제들이 강조하듯이 지적 자유와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에 기반하여, 지금 그리고 이후 살아갈 이들에게 정보와 사상의 공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의의이다. 삶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능동적 지식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도서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이다. 이에 1997년 제정된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 선언의 첫 번째 지표는 비차별 원칙이며, 두 번째는 검열 반대이다.

존엄과 평등은 도서관에서도 예외 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 양육자, 도서관 노동자, 성소수자, 창작자 등 누구라도 지역 주민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부정하거나 평등하지 못한 존재로 낙인찍히는 일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지식을 표현하고 추구하고 이를 매개하는 노동에 자긍심을 가지며 서로 연루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창작물과 공간운영과 같은 노동의 과정이 타인과 만나 사회적 가치를 가져오는 노동에 대한 권리 등 보편적 권리가 실현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평등 도서 퇴출전이 벌어지고 있는 도서관들에서 이 모든 것들이 멈춘다. ‘비전통적인 관계들’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며, 특정한 형식의 관계와 가족 형태를 정상화하고 이성애를 동성애보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게 하면서 사회적 낙인을 강화, 유지하도록 한다.

성평등 도서 퇴출은 한국 사회만의 파행이 아니기에 먼저 공표된 약속들은 다시 한번 존엄과 평등의 훼손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동성애 그리고 비전통적인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것은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보호의 정당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며, 민주주의 사회에 내재하는 평등과 다원주의 그리고

관용의 개념에 위배되는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고 동성애 혐오를 부추긴다. (유럽인권재판소, 2023)

모든 개인과 집단이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해 비차별, 비편향 그리고 증거에 기반한 교육과 정보 접근. 또한 아동과 사춘기 청소년의 발달 중인 역량을 고려한 교육과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26년 22호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일반논평(f))

단순히 책에 포함된 사상이 맘에 들지 않고 "정치, 민족, 종교 또는 기타 사상에 있어 '올바른 견해'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책을 제거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미연방대법원의 1982년 판시)

둘째로는 공공성을 비롯한 민주주의 실현의 불가능성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토대들을 공동으로 만들어가고 이를 간섭하는 어떤 정치 이념, 이윤 등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공동의 영역으로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 공공성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라고 할 때, 공공도서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도서 퇴출 사태는 원칙을 훼손하는 폭력 외에도 이를 막아낼 의무가 있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정치가 '누가 당선되는가' 혹은 누가 '위탁받는가'로 한없이 좁혀진 까닭과 동시에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인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국가나 정부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론과 비판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량과 과정을 보장받지도, 만들어내지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다양한 영역과 시민 주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비판과 요구 그리고 참여와 대항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평등정치 실현의 구체적 과제로 성평등도서 퇴출에 맞선 계획과 실천을 쌓아가고 있기에 과제와 요구를 다시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개별 지역에서 시민이란 일 주체가 직접 나서서 조사와 대응은 각 주체의 의미 있는 직접행동을 가져오고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퇴출 지목을 받는 도서와 전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규모를 고려할 때, 성평등도서 관련 진정을 접수한 국가위원회를 비롯한 책임 있는 이들의 우선 퇴출 시도 중단 조치,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필요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공론화와 시행의 과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대전] 토론문

: ‘인권의 제도화’ 이후 보수 단체의 공공내 진입문제를 중심으로

이혜선 (인권교육공동체숲 활동가, 전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운영의 롤모델이 되어, 약 7년여 간의 운영기간동안 타 광역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해마다 지속되어왔다. 이후에 부산시 인권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시행되면서 인권의 영역이 공적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점진적이고 유의미한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잘 운영해오던 위탁이 끝나는 시점 위탁운영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시험대에 오른 운영은 인권운동이 아닌 정직운동을 해오며, 인권에 수식어를 붙여 나쁜 인권, 혹은 바른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단체가 수탁을 맡게되어 대전지역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의 거센반발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안팎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1년뒤 예산 삭감과 더불어 대전시인권센터는 운영종료를 맞이하게 된다.

인권은 보수사회에서 어떻게 제도화 되었을까. 사실 인권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인간에게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 인권이 유행이 되던 시기 제도는 방법을 바꾸어 인간에게 인권을 논할 자격을 주기 시작한다. 실례로 전 대전시 인권센터장은 백석대학교 철학과에서 인권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본인을 인권박사라고 칭한다. 시대를 역행하는 개인의 주장을 학위만가지고 ‘바른 인권(?)’을 주장한다. 간단하게는 주변에서도 인권에 관한 활동을 10년 넘게 해온 인권활동가이며, 인권강사양성과정에 심사는 할 수 있으나 자격증이 없어 인권강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나 타이틀, 자격은 이들이 공공기관으로 들어오면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

세계인권선언, UN아동권리협약과 같은 선언을 재해석하여 천부인권을 특정종교에 맞추어 설명하거나, 협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을 무시하고 단어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를 설명하려는 우매함이 인권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다시 인권센터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들이 인권센터를 수탁했을 때,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은 기존의 인권강사들을 선별하여 아동의 권리가 부모에게 있음을 인정하느냐의 판가름으로 강의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고자 한 점, 특히 신문의 경우 인권기자단의 기사 보다는 센터장이 직접 외부 기고글을 받아 편집위원회가 반려한 글조차도 센터장 최종승인으로 발행하는 전형적인 ‘갑질’을 센터장의 권한이라는 명목으로 집행하기에 이른다. 이는 성평등을 위해 주장해온 대전시인권신문의 수고와 노력이 실린 기사를 한순간에 여성은 아이를 돌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어린자녀를 돌보는 것을 아버지보다 더 즐길 뿐 아니라 더 잘한다. (중략) 자연스럽게 형성된 성역할 인식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압이다” - <대전인권신문 2023년 4월호>

지금 성평등 도서의 퇴출 사태는 안타깝게도 예견된 일이라는 생각을 저버릴수가 없다. 보수사회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성’에 대한 알권리뿐 아니라 향유할 권리도 있다. 건강한 ‘성’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잘못된 경로를 통해, 혹은 왜곡된 성지식을 습득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고 있다. 현재 딥페이크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러한 문제는 성에 관해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 자유롭게 이야기할수 있는 문화가 없는 사회에서 비롯되었다. N번방, 사이버성범죄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과 성적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

인권이나 성평등을 금기시했던 보수단체들은 이제는 금기시 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이나 평등의 가면을 쓰고 개인을 억압하고 시대를 역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의 유입등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의 숙제는 시민들이 공론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어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 토론문

이선영 (경기도 초등 사서교사, 전교조경기지부 사서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근무중인 이선영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지켜야 할 지적자유 의미와 지적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모아 두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위의 의미에 따르면 도서관이 모으는 자료의 범위는 ‘온갖’ 즉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자료를 이용할 ‘일반’은 특별하지 않은, 전체에 두루 해당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도서관의 의미는 근대 도서관에 해당합니다. 그 이전의 도서관은 권력자의 것이었고, 그들은 책을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지식이나 생각, 의견을 공유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에 그랬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도 그랬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서적이 저자의 정치적 색깔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금서’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식은 무엇보다 빨리 앞서가고 도서관은 그것을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시대적 흐름에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또는 집단의 공격이나 역사적 가치판단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는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도서관 철학의 토대이자 윤리강령의 핵심가치로서 그 맥을 같이합니다. 지적자유 개념은 도서 검열을 넘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필터링, 도서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도서관 공간과 서비스, 이용료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계는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적자유 정의를 조금씩 수정·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개념은 1939년 미국도서관협회(ALA)의 ‘도서관권리선언’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1999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이 발표되어 세계 각국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2023년 7월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2019)에 따르면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총 4개 항 중 1, 2항) ‘도서관은 일부 개인과 집단이 전통적 관습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포함한 지식, 상상력, 아이디어 및 의견을 담고 있는 도서관 자료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서가에서 배제·폐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작년 각 시도 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성교육도서의 심의 및 폐기를 강요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23년 9월부터 24년 2월까지 총 4차례의 공문을 통해 성교육도서를 재심의하게 했고 그 결과 경기도 전역의 학교에서 2,500여권의 성교육도서가 폐기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폐기 이후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성교육도서 심의 결과를 발표했고, 심의한 책들 모두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성교육도서 모두를 심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심의한 책 중 1권을 제외한 책이 1차에 통과하였고, 그 한권도 재심의를 통해 통과함)입니다. 도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심의와 폐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 과정이 분명 외부의 압력 때문에 일어난 일련의 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주제의 책이 동시에 2500권이나 폐기되는 사건은 이제껏 없었고, 폐기 결과를 조사한 적은 더욱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압이 아니라면, 개별 학교에서 책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학생 교육에 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폐기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서 말한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료선정과 수집, 위원회 운영과 보호, 자료 재심의 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별 도서관들은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도서의 선정과 수집, 심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민원과 여론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진 폐기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고, 이미 심의를 통해 구입/배치된 도서들이었음에도 재심의를 대한 민원과 압박은 도서관 스스로 자기검열하게 하고, 이용자의 열람을 제한하게 했습니다. 특정 도서의 폐기는 경기도 학교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여러 공공도서관에서 ‘우리가족 인권선언’이라는 책이 대출불가(비치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서관에 책은 있지만 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치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가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폐기와 다름없는 ‘열람 제한’인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학교도서관의 2500여권 폐기 사태나, 공공도서관의 대출불가(열람제한) 설정의 원인은 같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속적인 민원과 해당 민원을 받아들여 재심의를 해야하는 기관의 책무성 때문입니다. 이렇듯 도서관의 지적자유 수호의 당위성은 재심의를 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무력화되기 쉽습니다.

한 번 금기시 된 주제, 폐기 된 도서를 다시 도서관의 공유 공간으로 불러오는 것은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검열을 거치게 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열람이 제한되거나 폐기된 책들이 자연스럽게 과거의 자리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한 명의 사서교사만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학교의 풍토에서 학생들의 알권리와 지식에 접근할 권리를 지키기위해 사서교사 홀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청이 학부모나 외부 단체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단위 학교도서관의 지적자유는 더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누구에게나 개진할 수 있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빠른 시간내에 연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언론에 공표되기도 하고 그것이 여론이 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은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운영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견’이라는 탈을 쓴 차별과 혐오의 발언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옳지 않고 틀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여전히 차별과 혐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린이니까 아직은 몰라도 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알아야 할 나이와 가르칠 내용은 누가 정해야 할까요? 잘 모르니까 더 잘 가르쳐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초등학교 보건 수업과 5학년 1학기 실과 수업에서는 우리의 몸과 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루는 내용과 깊이는 교사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수업들에 비해 학생의 반응이나 학부모의 민원을 많이 신경쓰는 수업임은 확실합니다. 또 가족의 범위와 형태, 장애인식에 대한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수와 구성원의 ‘틀’이 깨지기 시작한지는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차이’가 아닌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더 알고 싶은 것, 더 궁금한 것, 나와는 다른 생각들을 책에서 찾고 느끼고 배웁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지적자유는 배우고 있는 모든 ‘일반’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도서관 사서라면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책을 구입하거나 어린이실·학생 서가에 배치할 때 주저된다면, 그것이 외압에 의한 자기검열이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공공, 지역도서관의 예산이 삭감될 때 함께 연대해주십시오. 책 읽는 사회를 두려워하는 누군가에 주목해 주십시오. 열람이 제한되는 책들이 있다면 그 이유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외부 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열람이 제한되고, 폐기되는 책들을 구입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성교육도서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지탄하는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되찾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의견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지키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습니다.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한국도서관협회(2024),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일 시	2024년 8월 28일(수)
장 소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공동주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 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